

2013년 제1회 행정사  
민법총칙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

1.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이미 매도된 것을 알고 매수하였다면, 그것만으로 그 2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 ② 소송에서 증언을 하여 줄 것을 주된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급부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③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④ 부침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 ⑤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정답 1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이미 매도된 것을 알고 매수한 것만으로는 적극 가담이 되지 않고, 매도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매매할 것을 요청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적극 가담이 된다.

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는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 ②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에는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
  -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④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 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천연과실이다.

※ 정답 5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3. 조건이나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② 기한의 이익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④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정답 2**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 지 불명확한 경우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인이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는 청산인이 될 수 없다.
- ②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의 기재만으로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정답 3**

- ① 이사는 청산인이 될 수 있다.
- ② 각자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등기하여야 대항할 수 있다.
- 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 기간에 관한 계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94.5.30. 01시에 출생한 사람은 2013.5.30.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 ② 2013.5.15.08시에 승용차를 빌리면서 12시간 후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같은 날 20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 ③ 2012.3.8. 14시에 돈을 빌리면서 1년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2013.3.8. 24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 ④ 2013.3.23. 토요일 13시에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으면서 1개월 후에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2013.4.24. 24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을 1주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총회일이 2013.5.15. 10시라면 늦어도 2013. 5. 7. 24시까지는 총회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정답 4**

2013.3.23. 토요일 13시에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으면서 1개월 후에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2013.4.24. 24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6.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대리권남용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 ② 근로자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제출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그 사직서제출행위는 무효로 된다.
- ③ 진의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 ④ 표시가 진의와 다름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 ⑤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5**

진의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7.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 ②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가 인정된다.
-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 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 정답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표시되고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면 되므로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8.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파산절차 참가는 채권자가 취소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②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③ 재판상의 청구를 한 후에 소의 각하가 있고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는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로부터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④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⑤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그 주채무자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정답 3

재판상의 청구를 한 후에 소의 각하가 있고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로부터 중단된 것으로 본다.

9. 만 18세의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체결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 ② 母와 공동으로 받는 상속에 대한 甲의 승인
  - ③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오토바이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
  - ④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친권자 乙에 대한 甲의 부양료 청구
  - ⑤ 甲이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유언

※ 정답 2

상속에 대한 승인은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10.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乙을 상대로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甲과 丁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丁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두었더라도, 甲이 무권대리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하면 그로 인한 소급효는 丁에게도 미친다.
  - ③ 乙이 단독으로 甲을 상속한 경우, 乙은 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甲의 추인이 있기 전이라면,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라도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⑤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1

-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를 가지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③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철회권은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다.
- ⑤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1.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신의칙 위반에 대해서도 변론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없다.
- ②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국가가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⑤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도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정답 3

- ① 신의칙 위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②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 ④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⑤ 사정변경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12.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자신의 이름으로 甲의 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언제나 甲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② 丙이 甲의 지명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乙은 丙이 부적임자임을 알고 甲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甲과 丙 사이에는 아무런 권리, 의무관계가 없다.
- ④ 丙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면 甲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 ⑤ 丙이 甲의 지명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여도 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정답 4

- 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본인의 지명에 의한 경우에는 통지해태책임을 진다.
- ③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⑤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13. 민법상의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상대적 무효이다.
-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 ③ 폭리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주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④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후, 성년자가 되기 전에 그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 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정답 4

- ① 절대적 무효이다.
- ② 전부무효가 원칙이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주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수 없다.
- 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4.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법인의 대표자에 포함된다.
- ②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대표기관이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 ⑤ 법인이 대표자의 선임, 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

※ 정답 3

대표기관의 행위가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15. X부동산을 소유한 甲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출장을 떠났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직권으로 X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② 甲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甲의 임의대리인이다.
-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X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 ④ 甲의 재산관리인이 甲을 위해 법원의 허가 없이 X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
- ⑤ 甲이 사망한 경우, 재산관리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하여 X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다.

※ 정답 5

- 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 ② 임의대리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다.
- ③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허가하면 유효하게 된다.

16.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은 총유물에 대한 지분권을 갖지 못한다.
-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
- ④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 ⑤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한다.

※ 정답 4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제12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7. 甲은 채권자 丙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짜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乙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 乙 간의 매매계약은 허위표시로서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 ② 丙은 乙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乙로부터 X토지를 상속받은 자는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을 몰랐던 경우에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④ 乙로부터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을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 저당권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 받을 수 없다.
- ⑤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甲이 甲, 乙간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甲은 가등기권리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 정답 4

제3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저당권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저당권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은 10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이 원칙이다.
- ② 음식점의 음식료에 대한 채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 ③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채권도 소멸한다.
-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⑤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의 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

※ 정답 2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1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기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 ②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한다.
- ③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을 소멸시효의 중단과 같은 보존행위는 할 수 있지만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이용행위는 할 수 없다.
- ④ 유권대리의 주장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정답 3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20. 甲이 탄 비행기가 2006년 6월 7일 추락하여, 2010년 4월 12일 법원에 甲의 실종선고가 청구되었고, 2011년 2월 13일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2011년 2월 13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② 甲에게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의 상속인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실종선고는 甲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도 효과를 미친다.
- ④ 甲이 살아 돌아온 사실만으로 甲에 대한 실종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⑤ 甲의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정답 2

- ① 2007년 6월 7일 24시의 경과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③ 공법상의 법률관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④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사망간주의 효과가 반복된다.
- ⑤ 선의인 경우라야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책임을 진다.